

- 202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5. 11. 4.(화) ~ 11.17.(일) <14일간>
- 감사대상 기관 : 6개 소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포함
 - 정원도시국 : 정원도시국, 공원여가센터(4개소), 서울식물원 포함
 - 서울아리수본부 :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8개소),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포함
 - 미래한강본부 :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 서울대공원
 - 서울에너지공사
- 감사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1명
- 중점감사 사항
 -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여부
 - 불합리한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
 - 감사 관련 미비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주요 감사 지적사항

- 서울시 산업 구조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건물 부문이 가장 크지만, 예산 편성은 교통 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 비율과 예산 편성 간 차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고 표준화된 건물 에너지데이터 확보와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형 분산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활성화 전략, ESS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전환으로는 폐기물 감량이 미미하므로 실질적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배출 체계를 강화할 것.
- 생태경관보전지역 밤섬을 대상지로 표기한 불꽃축제로 인한 생태계 및 철새 서식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원녹지법」, 「도시숲법」 등 상위법 및 서울시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가로수 심의, 공원조성(변경)계획, 시설 요금 등에 대해 조치할 것.
-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조경공사에 준하는 정원조성을 완성품(기부 1식)으로 간주하여 기부심사로 추진한 사유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것.
- 서울시 재무과 기준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마당 등록 시 실제 계약한 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가족관계 등 분할 계약에 유의할 것.

- 동행정원, 매력정원 등 정원(식재) 조성 시 다년생 식물이 살아있음에도 중복 재조성하며, 기존 식생을 훼손하는 예산 낭비를 지양할 것.
- AZA 조건부 인증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적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재실사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것.
- 스마트 주차장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사용허가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번 주차장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관리 위탁 방식으로 새로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할 것.
- 본부가 자체 시행 중인 정수장 기술진단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디지털계량기 하자를 및 고장률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아리수 음수대를 학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하고 위생 관리 강화하여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수 슬러지처리 설계 단가 산정 시 운반 거리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반비 산정기준 마련 및 발주 방식을 개선할 것.
- 한강버스를 신속히 예인할 수 있는 예인선 건조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자연에 따른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 한강버스 정식 운항(9월 18일) 이후에도 운전 미숙, 화장실 오수 등 명백한 운영사 귀책이므로 손해배상·지체상금·운항결손액 산정 등 운항사가 명확히

책임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한강 유선장이 허가 목적과 달리 수익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선착장 본래 기능을 확대·정상화 방안과 함께 허가 관련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서남 2단계 건설사업에 있어 공공성훼손 우려가 없도록 공사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사의 부채 비율 관리 등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기차 충전기 결제 오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할 것.

□ 감사위원회 편성현황 : 11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박 귀 수
부위원장	국민의힘	박춘선	의사지원팀장	현 진 숙
"	더불어민주당	한 신	전문위원	배 성 진
위 원	국민의힘	김재진	입법조사관	유 시 범
"	국민의힘	김춘곤	입법조사관	이 혜 선
"	국민의힘	남궁역	입법조사관	신 휘 수
"	국민의힘	박중화	입법조사관	양 현 민
"	국민의힘	유만희	주무관	정 주 현
"	국민의힘	이봉준	주무관	김 선 희
"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주무관	온 현 지
"	더불어민주당	이용균	정책지원관	김 경 혜
			정책지원관	손 정 육
			정책지원관	강 규 이
			정책지원관	박 진 수
			정책지원관	서 효 정
			정책지원관	원 유 준
			정책지원관	한 상 임
			정책지원관	박 종 한
			속기 및 녹취 요원 (3명)	

2

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5. 11. 4(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5. 11. 6(목)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도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도시국 - 공원여가센터(4개소) - 서울식물원 ○ 서울대공원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5. 11.10(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아리수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아리수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2025. 11. 12(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한강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한강본부 - 한강사업추진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5. 11. 14(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너지공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5. 11.17(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정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3

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건의사항·자료제출 요구현황)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30	185	106	39
기후환경본부	78	45	25	8
정원도시국	소 계	93	60	26
	정원도시국	66	48	16
	서울대공원	27	12	10
서울아리수본부	68	35	22	11
미래한강본부	53	29	18	6
서울에너지공사	38	16	15	7

기후환경본부 – 45건

1. 서울시 산업 구조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건물 부문이 가장 크지만, 예산 편성은 교통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 비율과 예산 편성 간에 괴리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
2.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자치구 자체와 서울시 합동으로 과대 포장 점검 및 단속 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적발되는 업체들이 많아 효과가 미비함.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대 포장 기준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참여형 정책을 추진 할 것.
3. 에코마일리지 전용 앱 미비, 홈페이지 연동 불가 등 사용자 접근성 낮아 MZ세대의 확대가 미흡함.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체험형(케이미피 케이션) 요소를 도입하여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
4. 기후부의 탄소중립 인센티브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조기 중단된 상태임. 향후 통합 시까지의 운영 공백 방지 및 예산 연계 방안 마련하고 시민 혼란이 발생 하지 않도록 면밀히 안내할 것.
5. 명동 관광특구의 쓰레기 관리 체계가 부실함. 유동 인구가 많은 중앙 가로 쓰레기통 부족과 청결 관리가 미흡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6. 시민과 관광객의 인식개선을 위해 줍깅 캠페인과 외국인을 위한 다국적 안내 표지판 및 카드 등으로 홍보할 것.

7.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가 민간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어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짐.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8. 연도별 신고·등급제 목표를 자체 설정하기보다 전체 대상 건물과 참여 가능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목표를 재설정할 것.
9. A~E등급 평가뿐만 아니라 건물 에너지 절감량 등 정량적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10. 등급 공개를 거부하는 건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공개율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것.
11.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않음.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중앙부처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것.
12.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고 표준화된 건물 에너지데이터 확보와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
13.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전환으로는 폐기물 감량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체계를 강화할 것.
14. 수치상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보다 생활폐기물 자체 총배출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
15. 독려 수준인 분리배출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 확대와 홍보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16.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함. 단속원 을 늘리는 단속 중심에서 주민 홍보·제도 등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대책을 강구 할 것.
17.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감축 목표(50%)가 2년 연속 달성되지 않은 만큼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18. 1인당 종이 사용량 10% 감축 목표는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서별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서별 맞춤형 감축 방안 마련 등 관리 지표를 구체적으로 재설정할 것.
19. 종이 감축 실적과 예산, 온실가스 감축 간 연계를 명확히 하고 우수 부서에 예산 반영 등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
20. 시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시기를 결정하고 시범 운영을 실시할 것.
21.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및 4등급 경유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2.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행에 따라 장애인차 및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할 것.
23.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 전에 시민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충분한 제도 기간을 확보하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것.
24. 은평환경플랜트는 타 시설에 비해 폐기물 처리 효율이 낮고 운영비가 과다함. 적자의 50% 지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5.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법상 영향권 외 주민은 포함 불가하나 법 이외 별도 대화 기구 구성 등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
26. 은평환경플랜트는 음식물 혼입으로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관로 부식 문제가 발생하므로 별도 수거 체계를 도입할 것.
27. 기후환경본부가 서울시 미래 위기 대응의 주도적인 부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미래세대 관련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28. 시민이 기후환경본부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순 행사 중심이 아닌 기후 의제 중심의 홍보·캠페인을 강화할 것.
29. 단순 행정 수행을 넘어 AI 기반 기후위기 예측 연구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30. 비흡연자 보호와 환경관리를 위하여 담배 제조사 재원을 활용한 흡연 쉘터 및 필터 정화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할 것.
31.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할당 시 자치구별 재활용률 반영하여 재활용률이 높은 자치구에 차년도 반입 용량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32. 재활용선별시설 안전관리 실태평가를 단순 평가에 그치지 말고, 자치구별 안전관리 개선이나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
33. 반복되는 환경기초시설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작업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

34.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도 바닥재가 늘어난 것은 소각시설 노후화 또는 불완전 연소 때문이므로 현대화 사업 이전에 단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35. 소각재 재활용 MOU 체결 후 추진 성과가 미미함. 현재 진행 중인 MOU 사업은 적극적으로 참여·관리하여 정책화하고 MOU 종료 후에도 소각재 재활용 확대를 추진할 것.
36.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 권고기준 초과율이 증가하고 있어 검사 강화 및 베이크아웃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는 자가 조치 실행이 어려워 실내공기질 관리 및 규제를 더욱 철저히 할 것.
37.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한 중금속 미세먼지와 한강 수질 오염이 우려되므로 대기질 영향, 잔류물에 관한 연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까지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므로 인근 자치구에도 관련 지침을 확대 적용할 것.
38. 전기이륜차 보급은 작년 대비 예산을 2배 편성했으나 성능과 충전 편의성 부족으로 실적 및 예산집행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구체적 대응 전략과 실행 계획이 부재하므로 법 취지에 맞춰 지역 단위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민 참여형 모델 확산을 포함한 서울형 분산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것.
40. 현재 서울시 전력 자립률이 약 10%로 정체된 상황에서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중단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41.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의무에도 43개 기관이 미설치 상태이고 서울시는 기후부에 건의하는 등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음. ESS 화재 위험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서울시는 안전기준 마련과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하며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

42.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대비 실적과 예산집행이 모두 부진한 만큼 실현 가능한 보급 목표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43. 재생열(지열)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사업은 착공 이후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 실적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44. 스마트서울맵 내 폐배터리, 폐의약품 수거함 정보 제공 오류 및 관리 부실 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2차전지 수거함 위치도 등록할 것.
45.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은 업종 변경으로 유지관리비 지원이 줄고 설치 소요 기간이 길어 신청 철회가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률 저조하므로 사업 실행력을 높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정원도시국 등 - 60건

[정원도시국] - 48건

1.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등록된 밤섬 인근에서 개최된 불꽃축제에서 사업 주최측 행사계획 시 ‘밤섬’을 대상지로 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해 장소를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2. 도시공원인 선유도공원 내에서 불꽃축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조립, 해체 등 작업을 시행하는 장소로 지원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옳지 않고 흡연실 부스 설치까지 지원한 것은 공원관리상 안전문제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불꽃축제 행사로 인해 람사르습지이며 철새도래지인 밤섬에 화약 잔재물, 불티, 폐기물 등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생태계 및 철새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생태경관보전지역 외에 생태경관완충구역 지정에 대해 검토할 것.
4. 공원조성계획 관리 실태 점검을 2019년 이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원조성 계획 불일치한 사례에 대해 장기간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불일치하는 사유를 검토하여 현행화 즉각 조치할 것.
5. 1980~2000년대 초반까지 장기간 방치된 공원 불일치 사례가 다수 존재 하므로 과거 발생분까지 포함한 전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정리 조치 할 것.
6. 도면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고 공원시설이 훼손·변경된 사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질의에는 사례 1개소만 언급한 것으로 이외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조치할 것.

7. 대표(A)와 직원(B) 관계인 정원도시국 내 위원회로 활동했던 직원(B)이 유사한 사업자 명칭 회사 대표(B)로 활동하며, 사업자 등록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마당에 같은 주소 및 전화번호, 사무실을 사용하는 정황(A)+(B)이 있어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로 판단되므로 「지방계약법」 및 서울시 재무과 수의계약 규정 등을 고려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8. 서울시 도시숲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자치구에서 사업 시행 시 임의로 가로수를 추가로 반입·반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과 조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제재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9.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처리 사업에서 열매 그물망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암나무 교체사업을 하여 예산에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 태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10.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공원녹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조례를 위반하여 인상함으로써 시민에 피해를 준 부분, 수수료 추가부과(세금) 등에 대해서 개선 조치할 것.
11. 파크골프장 이용 안내 시 인터넷 예약 및 잔여석에 대한 예매방식을 일관되게 안내하고 있지 않고 홈페이지, 현장 사무실, 여가센터 직원 등이 각각 다르게 안내하여 시의회에 정확한 정보(자료)를 주지 않았으며, 시민과 민원인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으므로 시정조치할 것.
12. 서울시 도시공원 내 이용프로그램은 대부분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

해 추진하고 있는데, 월드컵공원의 노을공원 내 파크골프장과 노을캠핑장은 10년간 인터파크에서만 운영했으므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점검 후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임.

13. 정원도시국 공사 시행 시 하자검사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 하자검사 기간 및 횟수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령을 준수하여 체계를 정비할 것.
14.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조성·기부채납된 도시공원이 목적에 부합하게 조성 및 관리되고 기능하는지에 대한 정원도시국 차원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 할 것.
15. 기부채납이 완료되고 공원 조성(준공)을 했다면 공원의 위치, 공원의 명칭, 인터넷상 안내·홍보를 점검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자치구와 협의하여 조치할 것.
16. 토지보상 및 사유지 침해 관련 소송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일부 폐소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2025년 협의매수 사업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예산 낭비이므로 토지주의 권리자를 침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 협의매수 공모 신청건은 매년 많지만 보상이 되는 대상 필지는 한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예산편성 규모에만 기댈 것이 아닌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18. 사유지를 활용하는 시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토지보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시 토지주의 변심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지고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체계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

19. 재개발·재건축 등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실제로 어린이공원으로 기능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어린이 이용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놀이시설 등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어린이공원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시설 등을 보완, 점검하고 개선할 것.
20.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과 공동 개최됨에 따라 2개 행사는 개최 취지가 모두 퇴색하였고 참석자 또한 시민이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무원으로만 이뤄졌다는 면에서 행사는 목적 달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할 것. 행사는 취지에 맞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식물원만의 행사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
21. 서울식물원 예산으로 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을 지원하여 서울식물원 10주년 기념행사가 과도하게 축소되었고 행사 성격·장소·내용이 식물원의 정체성과 맞지 않게 기획되지 않은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자의적 집행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22. 서울식물원 해봄정원 부지 재산관리관이 서울시 타 부서로 되어있고, 현재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꽃정원, 작가정원 공모 등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식물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카페 입찰 시 상호명이 달라 취소된 사례가 있는데 입찰에 참가한 당사자가 잘못된 법인을 제출한 사례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등 시행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수할 것.
24.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마당 시스템에 폐업된 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되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계약마당 시스템 등록 및 계약 행정 추진 시 유의할 것.

25. 서울시 재무과 기준 수의계약 횟수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마당 등록 시 실제 계약한 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5회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관계 등 특수 관계에 의한 분할 발주 계약에 유의할 것.
26.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 옹벽 안정성과 토질 등 기술적 검토를 철저히 하고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
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공원녹지 조경공사에 준하는 정원조성을 완성품 (기부 1식)으로 하여 기부심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검토할 것.
28.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작가정원, 참여정원, 기업정원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녹지 등 조경시설과 무관한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어 시설의 적절한 설치 비율에 대해서 검토할 것.
29.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푸드트럭 선정 등 상업행위 등 공공성을 근거로 허용한 것인데, 이에 맞지 않은 허가 사항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원박람회 주최 (컨소시엄) 측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위를 재검토할 것.
30. 푸드트럭 이용 약관과 달리 운영일수를 자의적으로 늘려 참여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할 것.
31. 국제정원박람회 부스 운영 시 최초 계획에도 없던 일반 부스가 아닌 특정 부스를 카페 등 수익 시설로 운영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세외 수입 및 사용수익허가도 아닌 방식으로 제안서를 받아 민간 업체에게 상업 행위를 허가한 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 향후 재검토해야 할 것.

32. 공원이 공원의 용도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원도시국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자치구별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공원에 대해 현황 파악 후 해당 용도에 맞게 관리할 것.
33.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내 주차장 등의 시설률에 대한 공원 내 시설 현황 현행화 필요하고 근린공원의 경우 시설률 4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에 맞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법에 따라 운영관리 되도록 조치할 것.
34. 문래근린공원은 시설률이 39.33%로 시설이 포화상태인데, 이와 같은 시설 포화인 공원에서 조경시설을 줄이고 광장과 기반시설을 늘리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지양해야 할 것.
35. 일부 공원에서 공원조성, 정비 등에 관해 반대 여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시행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지키고 협의 과정을 지켜가며 사업을 수행할 것.
36. 오래 전 조성된 공원 내 위치한 주차장이 현재 공원 방문객을 위한 용도의 주차장으로 기능하지 않고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광역 근린공원이 아닌 경우 지역민을 위한 조경, 편의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주차장을 지하로, 상부를 공원화하는 등 방안을 모색할 것.
37. 정원도시국이 도시공원 총괄을 하고 있으므로 자치구가 운영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를 점검할 것.
38. 남산 하늘숲길 주변의 일부 수목이 제거되었고 전망대 하부 콘크리트 기초의 기본계획과 실제 규격이 상이하고, 공사 이후 식생 훼손이 된 부분을 보완 할 것. 또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

39. 동행정원, 매력정원 등 정원 내 식재 조성 시 다년생 식물이 살아있음에도 중복 재조성하며 정원 조성 횟수를 정량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기존 식생을 훼손하면서 조성하는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40.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실태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공원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은데 관리가 부족하므로 여가센터 차원 등 조직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41. 이촌시설 녹지 토지보상이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데, 해당 토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서울시 소유권이 발생하면 주차장에 대한 행정 사항을 정비할 것.
42.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로수 12,042주가 감소했는데 향후 정비사업이 본격 시작되며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대책 마련할 것.
43. 가로수 관리 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도시숲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44.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견 중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개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하며, 해외 사례, 국내 생태환경과 현장에 맞는 정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함. 견주가 자율적으로 맹견을 등록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할 것.
45. 국제정원박람회로 추진했던 뚝섬 내 지방정원 등록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 투자심사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
46. 산불 예방 대책 뿐만 아니라 발생 시,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47.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사업은 연천군과의 행정 협의에서 상당 부분 지체되어 수개월 지연되고 있으므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할 것.
48. 국제정원박람회 판매부스 유형 5개, 총 78개소에 대해서 상업적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실적 보고를 면밀히 시행하도록 하여 공원 운영관리 공공성을 확보할 것.

[서울대공원] - 12건

1. 운영 중인 코끼리열차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구매한 전기 차량(2011년)과 업체에서 구매한 전기 차량(2013년) 모두 사용 연한이 지나서 폐차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닐지 우려되므로 운행일지 작성을 포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할 것.
2. 코끼리열차 중 디젤 차량은 매연 발생 내용으로 시민 민원이 많은 만큼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2027년으로 예정된 신규 운영 업체 선정 시 친환경 차량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반영할 것.
3. 향후 예정된 곤돌라 공사시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코끼리열차 운영 확대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
4. 싸이쇼 등 대형주차장에서 공연하는 경우, 수많은 인파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함. 그리고 소음 발생으로 근방에서 주거하는 주민분과 소리에 예민한 동물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것.

5. 내년에도 유사한 대형 공연이 진행된다면 사용료에 비해 엄청난 수준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대공원과 배분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공연 시 폭증하는 노점상 발생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함.
6. AZA 조건부 인증과 관련하여 유인원관 환경개선 부분은 이미 2년간 보수를 진행했던 내용인데도 현장 실사 시 지적을 받았다는 점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문제 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지적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 또한, 생태적 동물사 조성 사업 등 잦은 사고이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 역시 재실사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것.
7. 대공원 내 게스트 하우스 조성에 관한 언론 기사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 전 시의회 보고 등 선행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할 것.
8. 큰물새장 파손으로 새들을 임시 사육장으로 이동하여 사육 중이지만, 임시 사육장이 매우 협소한 상황임. 또한 큰물새장 정비가 '27년이나 마무리될 계획으로 장기간 임시 사육장에서 사육 시 환경불량에 따른 폐사가 우려되므로 임시 사육장 환경개선과 함께 폐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것.
9. 서울랜드 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동문주차장 주차타워 건설 대신 기타 노후 시설 개선으로 변경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진행 상황이 불투명함. 얼마 남지 않은 사용 허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전체적인 시설 노후화로 안전 문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
10. 올해 태어난 서울대공원 호랑이 '설호'를 소개하는 데 있어 소품 활용 이벤트 정도로 소극적인 홍보만 진행됨.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미흡해 보이므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연구를 적극 진행할 것.

11. 서울대공원(특히 동물원) 직원 업무 분장 및 필수 인력에 관한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수 조사 실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 스마트 주차장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허가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주차장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관리위탁 방식으로 새로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할 것.

서울아리수본부 – 35건

1. 본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2. 수도계량기 구매조달 평가 방식이 제안 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기술경쟁력이 낮은(높은 하자율) 업체가 낙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할 것.
3. 상수도관 공사, 세척 등의 과정에서 혼탁수 발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
4. 현재 기술진단결과 Ⅱ등급 관로를 대상으로 관세척하고 있으나, Ⅲ등급 및 재개발 지역 관로의 정비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단기 정비 계획이 없는 관로의 경우 관세척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
5. 혹서기에 운영 중인 병물아리수 냉장고는 일회용 페트병 사용 저감을 위한 관련 조례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6. 학교 아리수 음수대를 학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전체 음수대 중 상당수가 내용연수(6년)를 경과하고 10년 이상 된 음수대도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크므로 내구연한 기준을 재점검하고 교체가 필요한 음수대 정비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8. 학교 및 기관과의 관리 책임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력하여 음수대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9. 펌프 설치사업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반복되어 사업 차질이 우려되므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10. 펌프 보증효율 미달 이력이 있음에도 동일 업체가 이후 사업을 재수주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입찰 및 계약 구조 개선할 것.
11. 아리수품질확인제 온라인 신청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고객번호가 아파트 대표번호만 존재하는 경우 개별 세대의 아리수품질확인제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선할 것.
12. 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가 내부위원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우려가 있음.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하자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3. 본부 전력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펌프의 경우 운전자의 경험에 의존한 수동·반자동의 비효율적 운전에 머물러 있으므로 펌프 최적 운영·관리 체계 구축할 것.
14. 아리수본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할 것.
15. 정수장 공정별 전력 사용 모니터링 및 공정 효율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할 것.
16. 수도계량기 및 단말기 구매 시 동일인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회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17. 수도계량기 구매 입찰 평가 시 선호도 평가(하자율 감점)를 강화하여 기술력 낮은 업체가 낙찰되지 않도록 할 것.
18. 2004년부터 구매하여 설치한 동파안전계량기가 2023년 물연구원의 검증을 통해 동파에 취약함을 결론으로 2024년 구매가 중단된바, 앞으로 신규 설비 및 기술 도입 시 물연구원을 통한 사전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
19. 소액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임. 향후 수의계약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할 것.
20. 본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 목표에도 불구하고 감축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고 그동안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을 국비·시비 매칭 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을 뿐 자체 재원을 투입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본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21.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심의를 내부(물연구원)에 맡기고 있어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기술심의 등을 통해 객관성 확보할 것.
22. 주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수장 기술진단의 전문성 및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23.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세척의 평가는 수질(탁도·잔류염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 세척 효과 평가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바, 세척 효과 검증 체계 보완할 것.

24. '관세적 효과평가 매뉴얼'에 관세적 절차, 방법 및 효과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은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량적 평가기준(세척 전후 비교 지표, 기준값, 성과평가 방식 등)은 다소 미흡한 바, 이에 대해 개선할 것.
25. 정수장 슬러지 원단위 및 함수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한 저감 방안 검토할 것.
26. 정수 슬러지처리 시 과도한 운반비는 예산 낭비 우려가 큰바, 설계단가 산정 시 운반 거리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발주 방식을 개선할 것.
27. 매년 수의계약 금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이 다수 있는바, 지침을 지켜 과한 수의계약은 지양할 것.
28. 디지털계량기 하자·고장률이 높아 재정·운영적 리스크가 크므로 하자·고장을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29. 하자율 기준 강화($0.4 \rightarrow 0.2\%$)에도 불구하고 낙찰 배제효과가 제한적이므로 품질개선 유도하는 방향으로 입찰 및 계약 제도 개선할 것.
30. 대형 디지털계량기의 높은 고장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계량기로만 구매하고 있는 현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것.
31. 향후 통신비 지출 증가에 대비해 통신요금 변동성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및 중장기적 비용관리 전략 수립할 것.
32. 학생들에게 아리수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심어주어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음수대의 경우 수거 및 관리 철저히 할 것.

33. 도·송수관로의 약 51%가 내용연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미흡·불량) 관로가 전무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크므로 안전진단 용역 관리 및 결과 평가 철저히 할 것.
34. 현재의 성과지표는 예산집행 및 사업물량 중심으로 운영되어 투입 예산 대비 정책효과 측정이 어려움. 단순 집행률이 아니라 사업의 정책 효과 중심 평가 체계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할 것.
35. 관세적 계획 수립 시 재개발 지역 관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대상 제외 시점 기준이 불명확함. 재개발 사업은 단계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되므로 합리적인 관세적 대상 제외 시점 선정 기준 마련할 것.

미래한강본부 - 29건

1. 의원 요구자료 요청한 '한강버스 점검 및 수리 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답변을 신중히 할 것.
2. 자전거 이용자 수가 1,500만 명이 넘고 최근 5년간 512건의 사고로 안전 우려가 큼. 2023년까지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겠다 하였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히 추진할 것.
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된바, 향후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
4. 한강버스를 신속히 예인할 수 있는 예인선 건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 이므로 건조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지연에 따른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5. 한강버스의 예고 없는 운항 중단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 안내 부족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전광판, 지하철 방송, SNS 등을 활용하는 등의 안내 체계 마련할 것.
6.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으로 이미 수천억 적자 상태인데, 한강 버스까지 더해질 경우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7. 한강공원 쓰레기 처리량이 쓰레기봉투 제작·판매량과 실제 처리량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해야 할 것임.

8. 강서 한강공원이 '보전' 명목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개선이 필요함에도 2026년 강서지구 특성화 사업예산이 전액砍감된 문제에 대해 시급히 재검토할 것.
9. 예산砍감으로 인해 강서 한강공원 특화 용역·콘텐츠 개발이 지연 또는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경 등 재반영을 통한 사업 정상 추진할 것.
10. 마곡 선착장이 단층 구조·편의점 중심 이용·위생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위생·관리 체계 개선할 것.
11. 보전지구→친수지구 용도 변경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강서 둔치 시민 편의 시설 조성 또한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용도 변경 절차를 시행할 것.
12. 잠실계류장 사업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 바 없는 서울미라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선행 사례를 분석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
13. 한강버스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운행 이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방안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14.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으므로 향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5. 한강공원 신규 나들목 사업 7개소 중 1개소만 설계 중이며, 그마저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16. 한강공원 조형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 대부분 철거,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매년 철거·보수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미흡한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형물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17. 잠실계류장 사업 지연(1년 이상)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본래 목적인 계류시설이 축소되었으나, 편의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동 사업은 계류장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이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18. 뚝섬수영장 사고와 관련하여 위탁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관리 청인 미래한강본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위탁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점검할 것. 또한, 동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19. 뚝섬 유선장 두 개 동을 점용하는 업체가 상업적 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약속하였음에도 출입을 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미래한강본부는 공공성이 지켜지도록 관리 할 것.
20.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이후 재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임대계약은 장기 계약(15년)으로 체결된바, 추후 점용허가 불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것.
21. 정식 운항(9월 18일) 이후에도, 운전 미숙, 화장실 오수 등 명백한 운영사 귀책인데 손해배상·지체상금·운항결손액 산정 등 운항사가 명확히 책임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22.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는 세부 내용이 미흡하여 허술한 부분이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 방법을 마련할 것.
23. 와류, 항주파 등에 대해 저감 장치 설치 등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24. 선장·승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장치 및 접안시설을 개선하여, 레저시설 이용자들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방안을 마련할 것.
25. 항로 안전을 위해 한강 준설은 지속적 관리·검토가 필요하며, 준설·수심 관리 등을 포함한 한강버스 운행 구간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26. 서울시는 운항 시 수심이 2.8m로 준설하여 충분하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목표 수심은 2.5m로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음. 한강버스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 등의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
27. 선착장에서 8개월간 16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잠실 구간에서는 항로 협소와 수심 불균형으로 인한 선체 파손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 선착장 이동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
28. 시설 구조상 하부는 서울시, 상부는 한강버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민간이 담당하나,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음. 수익 발생시 서울시는 수익을 한강버스 시설에 재투자되는 구조로 서울시 재정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상황으로 향후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9. 한강 유선장이 허가 목적과 달리 수익시설 중심으로 운영됨. 선착장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유선장 본래 기능을 확대·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에너지공사 – 16건

1. 공사 소관 위원회는 전문성 강화,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등 각각 고유의 역할과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그 중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에너지 정책위원회의 경우에 적합한 전문가들(현장 근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포함하여)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2. 서남 2단계 건설사업에 도입할 SPC 방식은 설립 시 민간기업 지위가 적용되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면제되므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없도록 공사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3. 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구상에너지 부단수공사 불법하도급 건에 관해 제재가 있었고 이에 구상에너지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결국 불법하도급이 아니라 특수장비 대여 등 성격이 다른 전문적 공사라고 결론이 난 것인데, 이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취소가 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으니 처분 취소를 고려할 것.
4. 구상에너지 소송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도급을 포함한 업무를 공사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
5. 마포 소각장 소송 패소 사례와 같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남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주민 협의·소통 절차를 강화할 것.
6. 발전소 예정지 인근 지역은 악취·소음·분진 발생 등 기피 시설이 이미 밀집된 곳으로 현재 열병합발전소 예정 입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주민들의 환경적 부담을 고려해 재검토할 것.

7. 발전소 운영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 증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할 것.
8. 2025년도 태양광 사업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으로는 26%로 저조하여 관련 사업에 소극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므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9. 공사의 2035 혁신경영 전략에서 나오는 태양광 사업 관련 계획이 부지 여건에 적합한 태양 발전소를 구축하겠다는 정도로 추상적인바, AI를 활용한 열 수요 예측 신기술 도입 내용과 같이 구체화할 것.
10.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통해 18,880k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공사에서 공급하고 있음에도 그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1. 열요금 지원 대상별(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치구 주민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리도록 할 것.
12. 서남 2단계 사업이 장기화할 때를 대비하여 공사의 부채 비율 관리 등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철저히 검토할 것.
13. 수의계약 건수와 액수가 증가하는바, 쪼개기 형태의 수의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추진 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것.
14.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남동발전의 경우 화력발전이 주력인 곳으로 이에 참여하게 된 것에 의문이 드는바, 공사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15. 전기차 충전기 결제 오류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할 것.
16. 추진 중인 목동 플랜트 현대화 작업에 현재 미운영 중인 신정 플랜트 활용 방안까지 연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할 것.

기후환경본부 -25건

1.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건물 부문의 감축 정책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장기적 전략 수립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2. 에코마일리지 민원 처리 시 조치 결과가 형식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민원 유형 별 분석과 공감 및 성의 있는 답변 등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3. 단순 인력 증원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문화 중심의 청결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4.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기후부)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국토부)가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중앙부처 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원화를 검토하기 바람.
5. 민간 건물주가 신고·등급제를 규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컨설팅 및 응자 상담 등 기존 지원을 넘어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중소형 건물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형별·규모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하여 소급 임금 자치구 부담액이 높은 자치 구는 서울시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8. 임금 개편 전까지 현 임금수준 유지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업무 환경개선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수도권매립지 공모 및 확보 과정이 서울시 폐기물 감축 정책과 연계되지 않음. 공모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의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전략을 수립하기 바람.
10. 시, 자치구, 사업소,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가칭) 종이 절감 협약' 도입과 기관별 우수 사례 공유 및 시상 등 참여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전까지 과태료 부과 없이 단속 차량에 안내 문자 발송과 전방위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12.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폐기물 감량 대책과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 바람.
13. 공공폐기물 반입량 감소는民間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함.民間 처리 분량 까지 포함한 총발생량 감축 실적 평가 및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기 바람.
14. 미래의 기후 리스크 예측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관련 용역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15. 기후테크 산업은 신산업 및 인재 양성 분야 사업으로 AI 및 양자기술과 연계해 서울형 청년·스타트업 양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가 기후테크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공용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이행 관련하여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무산 사례와 같이 주택가 밀집 지역의 빛반사 및 경관 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 기후부와 협의하여 기술·안전 문제를 고려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7. 요일별 생활폐기물 반입량 편차(월요일 집중 반입) 완화 필요하니 수거·운반 업체와 연계한 요일제 예약제 도입 등 물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8. 서울시 주최 행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후원 민간 행사에도 폐기물 관리 의무화를 검토하기 바람.
19. 전기이륜차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뿐 아니라 성능개선, 배달용 차량 보험료를 지원하고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은 구별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설치하기 바람.
20. 도심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민간 주차장과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확대, 민간 참여형 인센티브 도입,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굴 등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최근 3년간 신규 민간 자본 발전소 사업이 전무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더딘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2.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규 설치 시 안전기준 강화와 지하에 설치된 기존 충전 인프라는 이전 및 안전기준 보완을 추진하기 바람.
23. 2차전지 특성과 화재 대응을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24. 전기집진기 설치의 효과와 실효성을 검증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하기 바람.
25.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정원도시국 등 - 26건

[정원도시국] - 16건

1.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추진 시 서울시 기준에 맞게 추진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계약은 특히 유의하여 진행하길 바람.
2. 밤섬 일대에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구역 바깥 쪽으로 '완충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하기 바람.
3. 정원도시서울 추진으로 초화류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음. 전면 개신하는 비율이 높은데, 다년생 초화류와 같이 여러해 보는 초화류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길 바람.
4. 공원 내 화장실·놀이터·파고라 등 수요가 큰 시설 현황과 조성계획 간 불일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미한 변경이라도 체계적인 보고·승인 절차를 마련하길 바람.
5. 시유지 공원 부지가 사유지 건물과 무단 연결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의 협업체계 강화 및 관리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해주길 바람.
6. 자치구 공원관리 현황과 변경을 공원조성과 등 정원도시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시 보고 의무 강화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검토해 주길 바람.
7. 노을공원 파크골프장의 예약은 민간대행사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8. 서울식물원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국제심포지엄은 식물원 단독 기획·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9.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학계·관련 단체 중심의 참여가 되도록 추진해 주길 바람.
10. 행사 결과물(발표자료·정책 제안 등)을 식물원 발전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주길 바람.
11. 서울로 7017의 화분 등 시설물과 식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2. 서울로7017 고가 육교 승강기는 서울역, 남대문시장, 남산공원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람.
13. 가로수 고사한 뒤 그대로 방치해 보행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있으니, 대체 가로수를 심거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14. '남산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사업자가 두 개로 나눠진 '남산 하늘숲길', '한국숲정원' 용역을 중복 설계했으며, 구간이 줄어들었음에도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추진 체계를 점검하길 바람.
15. 국제정원박람회 부스 운영 시 장애인단체, 소상공인 등과 상충이 되는 별도 제안서를 통한 부스 상업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길 바람.
16. 원인자부담금이 가로수 식재, 공원 조성 등 도시숲 확충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람.

[서울대공원] - 10건

1. 대공원 내 사용 허가 시설과 관련하여 사용료 체납 등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체들을 관리하기 바람.
2. 서울대공원 방문 활성화 아이디어로 인기 동물(호랑이 등)을 활용한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대공원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코끼리열차 전기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 지형(언덕), 탑승 인원, 엔진 출력 등 실제로 운영 시 필요한 사양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했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매 전 전문 기관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등 기술 검증을 강화하기 바람.
4. 운영업체는 동일하지만, 캠핑장 주차장 사용 허가 기간과 캠핑장 사용 허가 기간이 다르게 산정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 두 기간을 같이 맞추어 사용 허가를 하기 바람.
5. 대공원에서 보유한 식충식물 등 식물자원의 규모에 비해 식물원 관련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고, 관련 홍보도 부족해 보임. 관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언론에 여러 번 공개되기도 한 동상 문제(위치 변경 혹은 철거) 등 대공원 내 조형물 관리에도 신경 쓰길 바람.
7. AZA 조건부 인증 관련하여 관련 사업 담당 직원이 매년 교체되는 상황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므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연속적으로 진행하기 바람.

8. 대공원에서 시설개선 공사 등이 어려운 사유 중 하나가 지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라 함. 멸종위기종 보전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공원인 만큼 과천시와의 적절한 협상 방안까지 고려해 지적 정리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9. 성희롱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공원 내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길 바람.
10.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사육사 등 동물 관리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내용이 부족해 보이므로 AZA SAFE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서울아리수본부 – 22건

1. 본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비해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임.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력과 성능을 검증하며, 우수 기술 선도적 적용하는 혁신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2. 장기사용 상수도관로 정비,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등 향후 대규모 투자 수요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 방안 마련하기 바람.
3. 현재 아리수음수대의 위치 정보는 아리수맵에서 표출하고 있으나, 음수대 수질검사 및 점검 결과를 아리수맵에 추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4. 아리수 음수대 정비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요 부품만이라도 교체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정비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5. 아리수 품질확인제 무료 수질검사를 실제 시민이 신청하는 사례는 매우 적음.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람.
6.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GIS, 아리수맵 등과 연계 활용 방안 검토 필요.
7. 디지털 계량기 오류 및 현장 문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 모니터링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8. 하자심사 결과(사용 가능한) 정상 계량기의 재사용 또는 대체 용도 활용 방안 검토 필요.

9. 정상 계량기의 불필요한 교체·폐기를 줄이기 위해 비철거 진단 및 사전 검증 절차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10. 정수장 간 전력원단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정수장별 효율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표준화된 관리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단수와 비용 문제로 운영 중인 관로를 직접 평가(진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정비사업과 긴급 관 복구공사 시 교체되는 관로를 본부 또는 물연구원에서 진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의사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12. 아리수 수질관리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시판 생수 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3. 정수장 기술진단 시 진단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역량을 신뢰하고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14. 서울은 지상 환경 제약 및 지하매설물 밀집(하수, 통신, 도시가스, 열수송관 등)으로 점검구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관 정비·세척 등 유지관리에 제약이 많은 상황임. 향후 비굴착·무단수 기법 등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관망 구성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5. 관로공사 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굴착면 기울기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복구비 산정 목적의 행정조례로 굴착작업 안전기준 대체 불가하여 사고발생 시 법적 분쟁 우려가 있음. 다만, 「산업 안전보건법」 기준이 서울시 여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16.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으로 과도한 환급금 발생하고 있으며, 부과 범위, 산정 기준, 정산 절차 등이 여전히 불분명하여 조례 개정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해 주기 바람.
17. 학교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이나 요청 사항을 조사하기 바람.
18.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미터 기술 기준안」에는 디지털계량기 시험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세부적이고 엄격한 시험기준이 부족한 상황임. 디지털계량기의 높은 하자·고장률 발생 현황을 고려할 때, 기계식보다 더 강화된 품질 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함.
19. 대형 디지털계량기의 경우 구경이 커질수록 하자·고장률이 급증하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별도의 강화된 품질시험 및 내구성 검증체계 마련이 필요함.
20. 계량기 보증기간이 기계식, 디지털식 모두 2년으로 동일. 전자센서, 배터리, 통신모듈 등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디지털계량기의 경우 보증기간 확대가 필요함.
21. 하자율 기준 입찰평가가 보증기간(2년)만 맞추는 품질에 그쳐, 근본적인 품질개선 유도에 한계 있음. 검정유효기간 미달률을 선호도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22. 관로 상태 평가 시 기술진단과 안전점검/진단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있고, 송수관로 진단은 두 과가 함께 진행하므로 진단결과와 관련자료 공유 등 잘 협의하고 보완해서 진행해 주기 바람.

미래한강본부 – 18건

1.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2.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 바람.
3. 현재의 구조에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류장 접근성 개선·운항 시간 단축·환승 동선 최적화 등 ‘대중교통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4. 향후 예인선 신규 도입(100톤급·30톤급)까지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민간 예인선 활용 체계나 긴급 예비선 확보 등 단기 안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샛강생태공원이 정비가 잘되고 가꾸어져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 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적·문화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바람.
6. 강서지구의 이용 수요·인구 규모·한강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 배분 및 사업 우선순위 재정립 필요함.
7. 마곡 선착장은 2층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8. 여의도 물빛 무대 시설 보수 이후 문화행사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향후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람.

9. 하자검사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하자 만료 전 14일 이내 실시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10. 발주 과정에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바, 사업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11. 한강공원 신규 나들목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므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것.
12. 한강공원 내 매점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체납이 반복되는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13. 기간제 일자리 관련 65세 이상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4. 향후 한강환경유역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타당성 및 설계 용역 등 보고 회부터 참석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5. 한강공원 내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들의 설치·보수 이력과 위치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GIS, QR 등을 활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16. 선박, 추진체, 선착장의 잘못된 설계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17. 배터리 교체 및 긴급 충전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를 바람.
18.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제출하기 바람.

서울에너지공사 – 15건

1. 인천 맨홀 질식 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협력업체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길 바람.
2. 공사는 지금 ‘혁신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1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던 ESG 경영위원회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바람.
3. 수소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의지는 높아 보이나,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규제 특례까지 받았음에도 그 이후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수소에너지 육성을 위해 미래수소경제위원회(가칭) 구성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길 바람.
4. 서남 2단계 건설사업이 공사가 발전사업 분야에서 SPC를 본격 도입하는 첫 사례인 만큼 SPC 운영 사례·리스크 분담 구조·자금조달 방식 등에 대한 전문 자문 체계 등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바람.
5. 태양광 등 기존의 소규모 SPC 경험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해, 서남 SPC 설계 시 적용할 수 있는 운영모델·관리 기준을 마련하길 바람.
6. 7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업비 등 SPC 재원 조달에 따른 재정 리스크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장기 관리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바람.
7. 발전소 운영에 따른 편의 시설 등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서도 검토하길 바람.
8.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 추진 방식이 공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SPC 설립으로 결정된 만큼 안정적으로 적기 추진되길 바람.

9. 열에너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선도하겠다는 비전과 전략에 맞춰 현재 수소차 충전소 등 일부에 국한된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찾아 내길 바람.
10. 최근에 주력했던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이후를 대비하여 신성장 에너지 주력사업처럼 시의적절한 명칭으로의 변경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람.
11. 공사에서 제시한 2035 혁신 경영 전략 내용이 추상적인 사업 설명 위주로 작성되어 있음. 중장기 재정 계획과도 연관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길 바람.
12. 시와 공사가 함께 출자 변경 계획 등 정리 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하여 노후 열수송관 관련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람.
13.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가상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상업건물을 제외한 공동 주택 등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람.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수립 하길 바람.
15. 전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 사업을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기후환경본부 – 8건

1.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역할과 권한 책임분담 관련 자료
2.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반입량 할당 기준 및 자치구별 발생량 증감 원인분석과 인구수 고려한 할당량 검토 결과(별도 보고)
3.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안전관리 실태평가 관련 별도 보고
4. 자치구 폐기물 관리 목표 할당 방식 설계연구 자료
5.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 단가 현황 자료
6.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소통 회의 결과
7.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분석한 이동측정차량 자료
8. 대규모 정비사업 중 지열 활성화 관련 자료

정원도시국 등 - 7건

[정원도시국] - 2건

1.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련 기부금 영수증 발행 내역, 환경과 조경 및 동아일보와의 업무 협약서
2.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푸드트럭 등 연장기간 동안 판매실적

[서울대공원] - 5건

1. 코끼리열차 서울시 구매(2011년)과 업체 구매(2013년) 전기차 가격·사양 비교
2. 코끼리열차의 내구 연한
3. 코끼리열차 전기차와 디젤차의 운영 비용 비교
4. 코끼리열차 운행일지
5. 큰물새장 사육 조류 통계 자료 및 폭설 피해 이후 조류 폐사 현황 자료

서울아리수본부 – 11건

1. 검침단말기 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 평가 방법 세부현황 및 문제점
2. 최근 2년간 품질하자 수도계량기에 대한 배상 현황
3. 동파에 취약한 역류방지용 계량기 구매 사유
4. 6개 정수센터별 배출수처리시설 내 탈수기 현황
5. 2025년 수선유지비 예산항목 중 긴급누수복구비, 민원 처리비 사업소별 예산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6. 2025년 사업소별 긴급복구 연간단가 업체 사업자등록증
7. 수도계량기 교체가 잦은 수전에 대한 원인조사 현황 및 세부 예방 대책
8. 스마트 원격검침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총 운영 비용 및 배터리 교체 현황
9. 스마트검침 단말기 통신비용 현황
10. 디지털계량기 구매수량 대비 단말기 구매수량이 적은 사유
11. 스텐레스 재질 대형 디지털 계량기의 연도별 구입가격의 편차가 큰 사유

미래한강본부 - 6건

1. 5년간 매몰된 사업 및 비용 자료
2. 하자보수검사 내역보고
3. 쓰레기봉투 현황보고
4. 유선장 임대차계약서
5. 안내표지판 2억원 예산집행내역
6. 재난안전실에 보고한 한강버스 사고 보고자료

서울에너지공사 – 7건

1. 협력업체 안전관리 강화 추진 현황
2. 에너지정책위원회 세부 현황 : 분과별 위원 세부 경력, 분과별 목적 및 추진 방향, 위원회 개최 계획 및 기대효과
3. 2025년 10월 ESG 경영위원회 회의 내용
4. 지속경영가능 보고서 사본
5. 하도급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법하도급 감사 관련 징계 현황
6. 동부지사 터빈 블레이드 구매 계약 관련 자료
: 관련 법령 및 절차(심사위원회 등) 포함
7.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 관련 공사 단독 추진 불가 사유